



NORTH KOREAN HUMAN RIGHTS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NORTH KOREAN HUMAN RIGHTS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이 금 순 (북한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서 재 진 (북한인권연구센터 소 장)

김 수 암 (북한인권연구센터 연 구 위 원)

CONTENTS

NORTH KOREAN HUMAN RIGHTS

제2권 1호 2007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인 쇄 2007년 8월

발 행 2007년 8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북한인권연구센터

등 록 제2-2361호(97.4.23)

주 소 (142-887)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8

(팩시밀리) 901-2546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디자인·인쇄 천세 2272-2727

<비매품>



| 국제사회 동향

- 1. 개별국가 3
- 2. 유엔 9
- 3. NGO 11
- 4. 분석 및 평가 19



| 북한의 대응

- 1. 미국에 대한 반응 25
- 2. 일본에 대한 반응 28
- 3. 남한에 대한 반응 33
- 4. 분석 및 평가 36



| 인도주의 사안

- 1. 탈북자 41
- 2. 납북자·국군포로 46
- 3. 이산가족 51
- 4. 기타 52
- 5. 분석 및 평가 53



국제사회 동향



| | |
|------------|----|
| 1. 개별국가 | 3 |
| 2. 유엔 | 9 |
| 3. NGO | 11 |
| 4. 분석 및 평가 | 19 |

1. 개별국가

가. 미국

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 북한 근로자 고용 국가에 문제제기(1.10)

- 레프코위츠 특사는 10일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몇몇 국가들은 북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협약을 통해 자금을 공급하고 있어 유엔의 결의를 위반하고 인권 문제에 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함.
- 남북협작의 개성공단을 포함해 북한인을 고용하는 국가들이 이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통해 북한 정권을 지원하는 셈이라며 문제를 제기함.
 -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인들이 1만~1만5천명에 달한다며 이들을 고용하는 국가의 기업들이 지급하는 임금의 상당 부분을 북한 정권이 가져가기 때문이라는 결국 ‘불량’(rogue) 정권에 물질적 지원을 하는 셈이라고 지적함.

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 헬싱키 협약 원용 주장(1.24)

- 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는 영국 런던의 헨리 잭슨 소사이어티 연설에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개선이 없으면 북한과 안보, 경제 부문 관계도 진전시키지 않는 ‘헬싱키 협약’ 방식의 대북 접근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함.

미 행정부, 북한 민주화지원비 예산 배정(2.5)

- 미 국무부는 ‘2008 회계연도 업무계획 보고서’에서 2008 회계연도 예산안에 북한 민주화를 지원하기 위한 ‘경제지원기금’(ESF)을 정규예산안으로서는 처음으로 2백만 달러를 책정함.
- ESF는 경제·정치·안보 상 여건을 감안해 개발도상국 등을 돕기 위해 책정하는 자금으로 북한의 경우 민주화 운동 단체 및 기구에 지원될 것임.

- 동아시아지역에서 유엔난민고등판무관과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이민·난민 지원비로 2천만 달러를 책정함.
 - 동 지역에서 탈북자를 보호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예상

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 북미간 인권대화 개최 주장(3.1)

- 미 하원 외교위 동아태소위가 주최한 북한인권 청문회에서 미국과 북한이 관계정상화에 앞서 향후 수개월 내에 북미간 인권대화를 개최할 것을 주장함.
-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정통성을 인정받으려면 인권문제에 대한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함.
- 미국으로 망명을 희망하는 탈북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할당 규모나 숫자를 정하지 않고 수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함.
- 북한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지원품을 군대 외에 일부 정권 엘리트들에게 지원하고 암시장에 되판다는 의혹을 사고 있으므로 국제기준의 분배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미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 발표(3.6)

- 2006년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억압정권으로서 북한당국이 주민의 모든 생활을 통제한다고 평가하고 있음.
- 북한정부가 주민들의 삶을 엄격하게 통제하면서 수많은 심각한 유린행위를 저지르는 등 인권상황이 극도로 열악하다고 평가
 - 정부를 교체할 권리의 박탈
 - 정치범을 포함한 초법적 처형, 실종, 자의적 구금
 - 생명을 위협할 만큼 열악한 교화소 상황
 - 교화소 내에서의 강제낙태와 영아 살해
 - 고문
 - 독립적인 사법체계와 공정한 재판의 부재
 -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 부정
 - 정부의 정보 통제

- 종교, 이동의 자유 및 근로자 권리 부정
 - 일부 송환 탈북자에 대한 심한 처벌
 - 중국국경을 넘은 난민 여성·소녀들에 대한 인신매매
- 개인의 존엄성 존중, 시민적 자유의 존중, 정치적 권리 존중(정부를 교체할 시민의 권리),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사회 및 민간단체들의 조사관련 북한정부의 태도, 차별·사회적 침해·인신매매, 노동권 등 6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인권실태를 기록·평가하고 있음.
 - 인터넷, 전화, 비디오 유통, 휴대폰 등 정보에 대한 접근 실태, 개성공단 및 해외근무 북한근로자의 노동권 등 특정 인권 부문에 대한 관심도가 강화되고 있음.

힐 차관보, 북한인권 개선 필요 언급(3.26)

- 힐 차관보는 조지타운대에서 열린 동아일보 주최 한반도문제 토론회 오찬강연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지만 (북미가) 완전한 관계정상화 즉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선 인권 등 북한이 현재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국제적 기준들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강조함.

미 국무부, 인권·민주주의지원보고서: U.S. Record 2006 발표(4.5)

-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 중 하나로서 국제사회에 참여하고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하려면 인권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북한인권은 미국정부의 포괄적 의제로서 미국 정부는 다른 나라 정부에 대해서도 대북관계의 중요 요소로 북한에 구체적이면서 검증 가능한 지속적인 인권개선 노력을 요구하도록 촉구하여 왔다고 밝힘.
- 중국에서의 탈북자 송환은 미국의 중대한 관심사라고 강조하면서 중국에서 송환된 많은 탈북주민들이 몇몇 처형사례들을 포함,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다고 설명함.
 - 중국에서 북한여성들의 인신매매가 이루어지는 등 탈북자들의 심각한 인권침해 현실에 우려 표명

- 중국에서 피난처를 찾는 탈북주민들의 송환을 중단하고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에서 이들을 접촉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중국에 지속적으로 요청
- 2005년 4월 부시 대통령은 후진타오 주석과 회담 시 탈북자 송환 문제 제기

미 국무부, '2006 테러보고서' 발표(4.30)

- 미국 정부는 '2006 테러보고서'에서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규정하였음.
 - 그러나 그 근거에서 한국인 전후 납북자 문제를 삭제하였음.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 북한인권 상황 부정적 평가(5.2)

- 미 국무부의 배리 로웬크론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는 하원 외교위 산하 국제기구 및 인권 소위원회 주최로 열린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은 신뢰할 수 없는 지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의해 통치되고 있는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국”이라고 비판함.

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 연례종교자유보고서 발표(5.2)

- 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연례 종교자유보고서에서 북한, 미얀마, 중국 등 11개국을 종교탄압이 심한 특별우려대상국(CPC)으로 지목함.
- 북한에 대해 어떠한 개인의 자유도 없으며 종교자유를 포함한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어떠한 보호도 없다고 기술하면서 북한 정부는 공공 및 민간의 종교 활동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정부허가의 종교 활동을 통제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함.
- 지난 2005년 보고서와 탈북자들에 대한 새로운 인터뷰 등을 토대로 북한은 모든 형태의 종교적 믿음을 김정일과 김일성 부자에 대한 개인숭배의 잠재적 경쟁자로 간주하고 있다고 주장함.

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 활동 보고서 의회 제출(5월)

- 북한인권법 제107조 d항에 따라 1년 동안의 활동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바, 레프코위츠 특사는 2007년 5월 1년 동안의 활동을 담은 두 번째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였음.
- 정치범수용소에서 15만~20만 명이 수용되어 있고 언론, 종교, 집회의 자유 부재, 공정한 재판과 이주가 부정되는 등 인권상황이 열악하다고 평가함.
- 2006년 5월 6명의 첫 그룹의 미국 정착이 허용된 이후 현재까지 30명의 북한 주민이 미국에 정착하여 살고 있음.
- 대북방송을 위해 8백만 달러, 북한인권과 언론 자유를 위해 책정된 2백만 달러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2008 회계연도에 의회에 1천만 달러를 요구함.

미 국무부, 연례인신매매보고서(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2007) 발표 (6.12)

- 미국은 각국의 인신매매 수준을 1등급, 2등급, 주의 요망 2등급, 3등급 등 총 4단계로 차별화하고 있는데, 북한은 인신매매피해방지법(TVPA) 상 최소한의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가장 낮은 3등급(Tier3)으로 분류되었음.
- 북한이 성적 착취와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남녀 성인과 미성년자 매매에 대해 최소한의 조치 없이 방관하는 국가라고 지적함.
- 수만 명의 북한주민이 국경을 넘어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불법 체류하고 있으며, 많은 탈북자들이 성적 남용이나 인신매매 기도에 취약한 상태라고 밝힘.
- 중국 국경을 자발적으로 넘은 북한여성들과 미성년자들이 밀매조직들에 붙잡히거나 결혼을 조건으로 팔려나가고 강제노동에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함.
- 15만~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정치범들에게 강제노동을 시키는 억압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해외의 자국 공관이나 기업 등 아주 인기가 높은 해외근무직종에 미상의 자국민을 파견하고 있으며, 이들은 매우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고 소개함.
 - 이동과 의사소통의 자유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급여도 북한정부가 통제하는 계좌에 입금되고 있음.
 - 체코는 북한근로자 초청 프로그램을 폐지하였기 때문에 북한근로자들의 여권이 만료되는 2007년 말까지 모두 귀국하게 된다고 밝힘.

나. 유럽연합

체코 정부, 북한 노동자 비자발급 연장 중단(1.30)

- 워싱턴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국제인권단체들로부터 제기돼온 체코 공장취업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침해 및 임금착취 논란과 관련, 북한 노동자들의 취업을 중단기로 함.
- 체코 내무부의 망명 및 이민담당자 토머스 하이즈만은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이후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를 언급하면서 “북한 사람들에게 취업비자를 새로 발급하지 않기로 하고, 이미 발급된 비자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힘.
- 체코 외무부는 “이번 결정은 행정적인 것이며, 정치적인 결정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타임스는 부연 설명함.

유럽의회 이바니 의원, 북한인권 언급(3.28)

- 유럽의회 한반도관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어스트반 셉트 이바니 의원은 3월 28일 VOA(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유럽의회가 현재 추가 북한인권결의안과 청문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탈북자 2인 영국의회에서 증언(6.19)

- 탈북자 안명철(38)씨와 신동혁(24)씨가 19일 영국 데이비드 캐머런 보수당수

와 영국·북한의회그룹 의원들을 만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증언하였음.

- 두 탈북자는 영국·북한의회그룹 주최로 19일 오전 런던 웨스트민스터 의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비참한 실상과 북한을 탈북해 한국에 오기까지 험난한 과정에 대해 밝혔고, 오후에는 캐머런 보수당수를 만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음.
- 두 탈북자의 영국 방문은 영국의 기독교 인권단체 세계기독교연대(CSW)가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살인, 강제노동, 강간, 고문 등 인권범죄들을 고발하는 보고서를 발간한 데 맞춰 기획된 것임.

다. 한국

정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 발표(2.13)

- 정부는 NAP 수립을 위한 제2차 공청회에서 국가 인권정책의 로드맵인 국가 인권정책기본계획(NAP-National Action Plan) 정부 초안을 발표함.
- 정부 NAP 초안은 자유권 보호 증진, 사회권 보호 증진,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관심·배려, 인권교육·협력 및 국제인권규범 이행 등 6개 부문으로 구성됨.
-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지원 분야에 ‘대북 인도적 지원’ 및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 및 국내외 NGO 활동 지원’을 포함시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발판을 마련함.

2. 유엔

비릿 문타본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유엔인권이사회에 보고서 제출(2.7)

- 식량권 등 ‘생존권’, 개인의 안보·인간적 처우 및 정의 등 ‘자유’, 난민 등 ‘망명’, ‘특수집단의 권리’, ‘국가당국의 책임’ 등 다섯 부문으로 구분하여 내용을

기술함.

- 북한주민의 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한 환경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크게 훼손되었다고 평가함.
- 세계식량계획이 2006년 190만 주민을 대상으로 식량을 제공할 프로젝트를 재개함.
 - 홍수로 인해 식량수확이 타격을 받음.
 - 식량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북한이 기존 형법에서 사형조항을 대폭 줄이고 사형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함.
 - 그러나 여전히 반국가활동에 관련한 많은 조항이 존속함.
- 탈북자의 지위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견해를 소개하면서 자신의 현장난민 개념을 강조하고 있음.
 - 형법을 개정하여 처벌을 완화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북한 인권 상황이 반인도적 범죄 수준이라든가 북한의 최고 지도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소개함.

한국 인권단체,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대한 견해 제출(3.17)

- 인권운동사랑방과 다산인권센터 등 8개 인권·평화단체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견해를 제출함.
- 특별보고관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못하고 일부 주장만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문제를 제기함.
 - 북한인권 상황은 반인도적 범죄 수준이라며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가능성을 암시한 대목은 인권 개선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의문스럽다고 주장함.
- 북한 인권 개선에 실패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과 특별보고관제도를 중단하는 대신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과 북한간의 협력 활성화 및 상호 존중의 원칙에 따라 북한과 인권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함.

유엔인권이사회,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임기 1년 연장

- 유엔인권이사회는 2004년 유엔인권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에 따라 임명된 비릿 문타본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하기로 결정함.

3. NGO

휴먼라이츠워치(HRW), World Report 2007 발표(1.11)

- 2006년 5월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의 활동이 재개되었지만 홍수와 미사일 시험발사에 따른 한국의 식량원조 중단 등으로 북한의 인도주의 위기가 더욱 심화되었음.
 - 영아, 임산부, 수유 여성, 노인 등 취약 계층의 식량난 가중
 - 고위 장교, 정보원, 경찰과 사법부 관료 등 엘리트 계층에 대한 우선 식량 공급
- 유엔총회의 결의안 채택 등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은 열악한 인권실태를 가시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음.
 - 정치범죄에 대한 연좌제 적용 지속
 - 인권기구의 접근 불허 등
- 피의자들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부정, 고문 및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대우를 받고 있음.
- 2006년 미국 정부는 10명의 북한 주민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했으며,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벨기에,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등 7개의 유럽연합(EU) 회원국이 1990년대 후반 이후 거의 300명의 북한 주민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했음.
- 485명의 남한 주민이 납치되어 억류되어 있으며, 납치 희생자들 중 일부는 대남 선전 방송에 이용되거나, 북한의 간첩 훈련에 이용되어옴.

- 남한 기업들은 북한의 요구에 의해 노동자들의 월급을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불하지 않고 북한 정부에 지불함으로써 현행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위반하고 있음.
 - 개성공단 노동규정은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의 권리, 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 해로운 아동 노동 금지에 대한 국제적인 노동자 보호 기준에 전혀 미치지 못함.

국경없는 기자회, '2007 세계 언론자유 연례보고서' 발표(2.1)

- 국경없는 기자회는 '2007 세계 언론자유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언론탄압이 심한 나라로 규정하였음.
 - 북한의 언론자유지수는 6년째 꼴찌를 기록함.
 - 북한 전체주의 정권은 북한국민들에게 독자적인 어떤 정보 습득을 최대한 막고 있다고 지적함.
- 북한의 철권통치자인 김정일은 언론을 완벽히 장악하고 있다면서 김정일은 국경없는 기자회의 비판을 수용하고 언론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함.
 - 모든 기자들은 하나의 실수 없이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찬양 해야 한다고 설명함.

미 선교단체 오픈 도어즈, 북한종교 실태 발표(2.9)

- 공산권 국가를 상대로 선교 활동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선교단체 '오픈 도어즈'는 홈페이지에 게재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을 세계에서 기독교 탄압이 가장 심한 국가로 지정함.
- 지난해 북한 당국에 체포된 기독교인들이 2005년보다 더 많다는 정보가 입수되었다고 밝힘.
 - 5만~7만명의 기독교인들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생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함.

프리덤하우스, 열린북한방송에 자금 지원(2.22)

- 미국의 보수 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가 한국의 민간 대북 방송인 열린북한방송(Open Radio of North Korea)에 2만 5천 달러를 지원하기로 함.
- 열린북한방송은 프리덤 하우스측과 이산가족 및 납북자, 국군포로와 관련된 내용, 자유, 민주주의와 관련된 세계의 사건 사고 소식, 자유와 민주주의에 관한 문학작품 등을 방송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 프리덤 하우스는 국무부로부터 2백만 달러의 지원을 받아 2005~2006년 미국, 한국, 유럽에서 4차례에 걸쳐 국제북한인권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열린북한방송 지원금도 국무부 예산에서 지출된 것임.

북한인권시민연합, 『고문의 공화국 북한』 발간(3.19)

-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정치범수용소, 교화소, 집결소, 노동단련대, 꽃제비수용소 등에 수감됐다가 2000~2005년 탈북한 20명을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벌여 지역별·시기별 고문실태를 기술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1999년 8월 이후 북·중 간 탈북자 강제송환에 관한 불법적 협조관계가 정례화 되었으며 함경북도 회령시 보위부의 고문 실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단순 탈북자를 수감하는 지상의 감방과 분리된 ‘지하감방’의 실체에 주목함.
- 북한의 탈북자 정책을 유죄추정과 고문에 전적 의존시기(1999년 이전), 보위부 체계정비 및 기관 간 역할분담과 중국의 협조시기(1999~2002), 단순 탈북자에 대한 처벌완화 시기(2002~2003) 등 시기별로 구분함.
- 북한이 2004년 4월과 5월에 걸쳐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2005년 7월 한 차례 더 수정·보충했으나 이후 어떤 실질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함.

셸 마그네 본데빅 전 노르웨이 총리, 유엔과 EU의 북한인권 적극 대응 촉구(3.20)

- 셸 마그네 본데빅 전 노르웨이 총리는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의회에서 기자회견과 강연을 통해 6자회담의 틀 내에서도 북미 또는 북일 간 실무그룹 접촉 등을 통해 북한의 인권문제가 북 핵문제와 함께 다뤄져야 한다고 촉구함.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북한 인권 문제를 최우선 순위에 놓고 대처할 것을 주문하고, 유럽연합(EU)에 대해서도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함.

북한민주화위원회 출범(4.10)

- 탈북자동지회,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등 탈북자 단체 20개가 연대하는 ‘북한민주화위원회’(북민위)가 창립되었음.
 - 북한 민주화를 염원하는 전체 탈북자들과 대한민국의 양심세력이 함께 하는 강력한 중심 조직될 것이라고 선언
- 북한 정치범수용소 해체 운동, 재중 탈북자 구출, 한국 정착 탈북자 역량강화 사업, 북한 내 민주세력 확산 지원 운동 등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힘.
 - 학술사업 및 대북정책 개발, 친북 정치인 반대운동도 진행

북한자유주간 행사 개최(4.23~28)

- 2004년부터 미국 의회가 지원하는 제4회 북한자유주간 행사가 금년에도 워싱턴에서 개최되었음.
 - ‘자국민 보호실패’ 토론회와 탈북자와 탈북 지원운동가의 인권탄압에 대한 의회 청문회, 북한의 종교탄압에 관한 토론회, 북한과 탈북자들을 위한 기도회, 북한의 인권침해 참상을 담은 북한학살 사진전 등의 행사가 개최됨.
- 자유북한방송에 의하면 부시 대통령은 4월 27일 격려 메시지를 통해 존엄과 자유와 번영 안에서 사는 날이 올 때까지 “북한주민들의 투쟁, 그들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자유와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에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소개함.

- 자유북한방송은 북한자유주간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방미 중인 북한민주화위원회 대표단이 4월 26일 미 국무부를 방문했다고 소개함.
- 북한자유주간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미국의 인권단체 디펜스포럼의 수전 솔티 대표는 4월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회견에서 “북한의 진짜 문제는 주민들의 끔찍한 수난과 고통”이라며 “북핵문제로 인해 주민들의 인권 문제가 소홀히 다루지고 있다”고 지적함.

프리덤하우스, ‘2007년 언론자유’ 보고서 발표(5.1)

- 프리덤하우스가 세계 언론자유의 날(5.3)을 앞두고 공개한 ‘2007년 언론자유’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은 국가별 순위(최악 100점)에서 북한은 97점으로 꼴찌를 차지함.

미 인권단체들, 북한인권법 실효성 비판(5.9)

- 미국의 소리방송(VOA, 11일) 보도에 따르면 인권단체 대표들은 조지타운대 법률대학원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인권법의 지지부진한 집행 상황을 비판함.
- 조엘 차니 Refugee International 부대표는 임시직에 인권 관련 업무 경험도 거의 전무한 레프코위츠 특사 대신 정규직에 업무 경험이 풍부한 인물로 교체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함.

프리덤하우스, ‘2007 세계의 자유’ 연례보고서 발표(5.10)

- 프리덤하우스는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해 비자유국가군(Not Free)으로 분류하고 시민적 자유, 정치적 권리 모두 최하위 등급인 7등급으로 분류하였음.
- 미국의 인권운동가인 데이비드 호크 전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장은 자유아시아방송(RFA, 18일)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자유지수가 이전과 비교해 전혀 달라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몇몇 부문에서는 상황이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함.

프리덤하우스, 『잔인함의 집결』 보고서 발표(5.21)

-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실상을 폭로한 『감춰진 수용소』의 저자인 국제인권전문가 데이비드 호크는 프리덤하우스에 발간된 『잔인함의 집결』(Concentration of Inhumanity) 보고서를 통해 로마규정 제7조의 용어와 규정, 인도에 반하는 죄 관련 국제관습법에 따라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인 관리소의 억압현상에 대해 분석함.
-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김정일 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요구함.
 - ICC에 북한 사건을 회부하는 것은 유엔안보리의 역할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안보리 또는 총회의 추천에 따라 임명하는 조사위원회나 전문가그룹이 북한인권 조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 최근 탈북자들로부터 로마규정이 발효된 2002년 이후 북한정권이 저지른 인권 유린행위의 뚜렷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다고 주장함.
- 북한정권의 잔학행위는 ‘로마규정’이 규정한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된다고 주장함.
 - 북한당국의 정치범 고문, 독방 감금, 양심수 실종, 여성수감자 성폭행 등 위법행위가 ICC의 처벌 범주에 포함된다고 분석

북한인권 국제포럼 개최(5.21~22)

- 북한민주화위원회와 프리덤하우스는 ‘6자회담과 북한인권’이라는 주제로 공동으로 북한인권 국제포럼을 개최함.
- 동 포럼에서 ‘북한 정치범수용소 억압실태 조사 발표회’(Concentration of Inhumanity)를 개최함.

국제사면위원회(AI), ‘2007년 연례인권보고서’ 발표(5.23)

- 북한인권상황에 대해 탈북자 문제, 식량난, 강제실종, 방문 거부, 표현의 자유, 사형문제 등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음.

- 지난 해 북한주민의 12%가 굶주렸으며, 식량난이 이전에 비해 더욱 악화되는 등 식량권과 생명권을 포함한 북한인권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다고 공개함.
- 중국 내 탈북자를 10만여 명으로 추산하면서 150~300명이 매주 북한으로 송환되고 있다고 추정함.
 - 탈북자 가족들이 실종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데, 한 탈북자는 북한에 있던 가족, 친구 19명이 실종되었다는 증언을 소개
 - AI본부에서 탈북자 문제를 조사할 예정인데, 올해 말 혹은 내년 초에 북한 관련 보고서가 발표될 것이라고 소개
 - 아시아지역 내 탈북자의 증가 그리고 중국, 태국, 라오스로 간 탈북자들의 강제북송과 그들 가족의 강제 실종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
- 국제사면위원회는 2006년에도 북한사회에는 공개처형과 고문 등 인권유린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음.

북한인권운동본부 출범(5.28)

-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등 각계인사 485명은 보수단체인 선진화국민회의 산하 조직인 ‘북한인권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출범시킴.
- 북한인권 개선, 생명관련 인도적 지원, 대북지원 시 투명성과 상호주의, 대화와 압박 병행, 남북대화의 전략적 이용 배제 등 대북정책 6대원칙을 발표함.
 - 개성공단 북한근로자 임금을 노동자에게 직접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
 - 남북정상회담은 북핵 폐기와 인권개선 등 남북관계의 커다란 진전이 있을 때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

세계기독교연대(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North Korea: A Case to Answer, A Call to Act 발표(6.20)

- 수감자와 수용소 경비원이 증언한 수감자 사망률 5~10%와 극심한 굶주림 등을 감안하면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중 사망자가 현재까지 38만~100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힘.

- 북한정권에 의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반인륜적 인권 유린 행위가 저질러지고 있음.
 - 처형, 강제노동, 강제 추방, 자의적 구금, 고문 및 학대, 강제실종, 성폭력 등의 인권유린 행위 자행
-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 유엔이 대응에 나서고 국제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함.
 - 위원회는 강력한 권한을 위임받아야 하며 인권유린 유형과 규모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
 - 북한당국이 존재자체를 거부하면서 협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명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인권통계백서 2007』 발표(6.29)

- 2003년 설립된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한인권 피해 자료의 수집과 분석, 북한인권 DB 구축 및 관리 역할을 수행하여 왔는 바, 그동안 축적한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처음으로 『북한인권통계백서 2007』을 발표하였음.
 - 주관적인 설명과 기술을 배제하고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보관된 정보를 객관적인 통계프로그램(NKDB DB & SPSS 12.0)활용하여 제공
- 탈북자 549명의 면접 내용과 탈북·방북자가 쓴 책 154권, 2006년 발행된 주간지 6종과 월간지 16종 및 학술지 15종, 신문기사 등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에는 한계가 있음.
- 1950년 이후 수집된 3,903건의 사례 중에서 존엄성 및 자유권 침해는 2,315건(59.3%), 즉결처형 등으로 인한 생명권 침해 624건(16%), 이동 및 주거권 침해 290건(7.4%) 등으로 집계되었음.

4. 분석 및 평가

유엔과 개별국가의 북한인권 관심도 상대적 저하

- 6자회담에서 2·13합의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초기 조치가 이행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관심이 집중됨으로써 개별국가 차원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저하된 것으로 평가됨.
- 유엔인권위원회 체제 아래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어 유엔 차원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던 상황과 비교할 때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절차를 마련하는 데 주력함으로써 유엔 차원에서의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도도 상대적으로 저하됨.
 - 다만,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는 1년 연장됨.
- 진보성향의 한국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유엔인권특별보고관 제도의 북한인권 개선 실효성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됨.

북한당국의 책임론 부각 및 논쟁

- 지난 해에 이어 유엔안보리가 북한인권문제에 개입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프리덤하우스 보고서에서 보듯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인도에 반하는 죄를 자행한 북한당국을 국제 형사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됨.
- 문태본 보고관이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견해를 소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진보성향의 한국 인권단체들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논쟁이 전개됨.

헬싱키 협약 원용, 북한인권 개선 논의 지속

- 북한인권법에서 헬싱키 협약을 동북아 지역에 원용하여 북한인권 개선을 권고하고 있는데, 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개선이 없으면 북한과 안보, 경제 부문 관계도 진전시키지 않는 ‘헬싱키 협약’ 방식의 대

북 접근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함.

북한인권법에 따른 예산 책정과 북한인권법 실효성 논쟁

- 미 행정부가 2004년 북한인권법 통과 이후 처음으로 2008 회계연도 예산안에 북한 민주화를 지원하기 위한 ‘경제지원기금’(ESF) 정규예산안으로 2백만 달러를 책정함.
 - 2백만 달러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에 지원됨으로써 북한인권 개선 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30명의 탈북자의 미국 정착을 허용하고 일부 예산 배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인권단체들이 북한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는 데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을 제기하기 시작함.
 - 특히 북한인권특사의 전문성에 대해 문제 제기

북미관계정상화와 북한인권 개선 강조

- 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는 미국과 북한이 관계정상화에 앞서 북미간 인권대화가 개최되어야 하며,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정통성을 인정받으려면 인권문제에 대한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함.
- 힐 차관보도 북한과 미국이 완전한 관계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권 등 북한이 현재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국제적 기준들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 미 국무부가 발간하는 인권·민주주의지원보고서에서도 북미관계가 정상화되려면 북한인권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개성공단, 해외 파견 북한근로자의 노동권에 대한 관심 지속

- 레프코위츠 특사는 남북합작의 개성공단을 포함해 북한인을 고용하는 국가들이 이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통해 북한 정권을 지원하는 셈이라며 문제를 제기함.
- 미 국무부는 연례각국인권보고서에서 개성공단 및 해외근무 북한노동자의 노

동권 등의 실태를 자세하게 기술함.

- 또한 미 행정부는 연례인신매매보고서에서 해외에 파견된 북한근로자들이 매우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고 비판함.
 - 이동과 의사소통의 자유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급여도 북한정부 통제하의 계좌에 입금되고 있음.
- 체코 정부는 체코 공장취업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침해 및 임금착취 논란과 관련, 취업비자를 새롭게 발급하지 않고 이미 발급된 비자도 연장하지 않기로 함.
- 휴먼라이츠워치는 연례보고서에서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 직불 문제와 노동 규정 문제를 제기함.

국내외 비정부인권기구들의 북한인권 특별보고서 활동 강화

- 국내외 비정부인권기구들이 북한인권 실태를 고발하는 보고서의 분야가 세분화되고 있으며 보고서 발간 활동이 강화되고 있음.
 - 북한인권시민연합, 『고문의 공화국, 북한』
 - 프리덤하우스, 『잔인함의 집결』(Concentration of Inhumanity)
 - 세계기독교연대(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North Korea: A Case to Answer, A Call to Act』
 -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인권통계백서 2007』



북한의 대응

II

- | | |
|--------------|----|
| 1. 미국에 대한 반응 | 25 |
| 2. 일본에 대한 반응 | 28 |
| 3. 남한에 대한 반응 | 33 |
| 4. 분석 및 평가 | 36 |

1. 미국에 대한 반응

미국의 반인권적 정책 비난

■ 미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송이폭탄 제공을 반인권적 정책이라고 비난

- 북한은 3월 13일 『민주조선』 논평을 내고 미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송이폭탄 제공을 반인권적 정책이라고 비난함.
 -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에서 진행된 송이폭탄 사용금지와 관련한 국제회의에서 사람들에게 치명적 피해를 주는 송이폭탄의 사용과 생산, 이동, 비축을 금지하며 이미 비축된 이 폭탄의 폐기와 불발탄 제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제적인 조약작성을 2008년까지 완성한다는 《오슬로선언》이 채택되었는데 이것은 미국의 반인권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직접적 규탄으로 된다.”
 - “지난해 7월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히즈볼라흐 무장세력사이의 무장충돌시에도 미국은 이스라엘에 다량의 송이폭탄을 제공해주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송이폭탄사용범죄를 《반테로》행동으로 극구 비호두둔해주었다.” (민주조선, 3.13)

■ 미국의 테러혐의자에 대한 비밀감옥 운영 비난

- 북한은 유럽이사회가 미국의 인권유린을 담은 조사보고서를 발표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인용하여 북한의 인권유린 실상을 강력히 비난하였음.
 - “유럽이사회조사그룹은 보고서에서 미중앙정보국이 《반테로전》의 미명하에 《테러혐의자》들을 유럽에서 비법랍치하고 로므니아와 폴스카 등 여러 동유럽나라들에서 비밀감옥을 운영하였으며 그들을 발전도상나라들로 이송하여 고문을 가하는 인권유린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적 자료들을 폭로하였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미국의 인권유린범죄사실을 명백히 조사하고 인권유린에 책임있는 자들을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민주조선, 6.19)
- 북한은 또한 국제대사령(AI)을 비롯한 6개 인권단체들도 보고서를 발표하여 미국의 인권유린만행을 날날이 고발하였다고 주장하며 미국을 비난함.

- “그들은 보고서에서 《테러협약자》로 체포된 후 재판없이 미중앙정보국의 비밀감옥에 수감되어있는 이른바 《유령구금자》가 수십명에 달한다고 하면서 그 명단을 공개하였다. 그리고 수감자가 더는 없다고 하는 미국정부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비난하고 미국이 수감자들의 신변에 대해 설명할 것을 요구하였다.”(민주조선, 6.19)

▣ 미국의 테러협약자에 대한 불법체포, 고문, 공개재판 비난

- 북한은 국제대사령(AI)을 비롯한 6개 인권단체들도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테러협약자에 대한 비인권적 처사를 비난함.
 - “지난 6월 9일 부쉬의 이탈리아방문과 때를 같이하여 이탈리아의 밀라노재판소는 미중앙정보국이 2003년 밀라노에서 이슬람교인을 비법적으로 체포하고 에짚트로 이송하여 고문한 사건에 대한 공개재판을 시작하였다.”(민주조선, 6.19)
 - “미국이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자로 몰려 국제사회의 비난과 규탄의 대상이 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고 주장하며, 국제사회가 미국을 인권에 대해 말할 자격조차 없는 극악한 인권유린의 왕초라고 규탄배격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민주조선, 6.19)

미국의 국내 인권문제 비난

▣ 미국이 세계최대의 인권불모지라고 비난

- 북한은 미국이 세계최대의 인권 불모지라고 주장
 - “인권은 국권이다. 미국이 주제넘게 남의 국권문제, 주권문제에 간섭하기에는 제 집안의 허물이 너무도 엄중하고 짓고 있는 죄가 너무나 무겁다.”
 - “《반테로전》의 미명하에 수많은 사람을 전쟁터에 내몰아 황천객이 되게 하고 인권,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애국자법》 등 전시악법들의 조작과 시행으로 파썸적 경찰통치체제를 강화하고있는 미국은 세계최대의 인권불모지이다.”(조선중앙통신, 6.11)

▣ 미국내의 인권문제 부각

- 북한은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인권문제》에 대해 운운하는 것은 인권에 대

한 모독이며 세계양심에 대한 기만, 우롱이라고 하면서 미국은 그 어떤 술책으로써도 세계최악의 살인마, 인권유린자로서의 정체를 감출 수 없다고 강조하였음.

- “미국은 인디안들을 멸종시키기 위한 살륙전을 대대적으로 감행하여 그 시체더미위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운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미제는 인권유린의 피비린 역사를 기록하여왔다.”
- “미국이 전조선과 아시아에 대한 군사적 지배를 노리고 도발한 조선전쟁은 세계최대의 살인마, 인권유린자로서의 미제의 정체를 날날이 고발하는 산증거로 된다. 지난 조선전쟁시기 미제가 저지른 극악무도한 인간도살, 인권유린죄악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지워버릴수 없다.”
- “1960년대말 월남에서 감행된 무고한 평화적 주민들에 대한 미제의 야수적 학살만행도 역사에 기록되어있다.”(로동신문, 7.19)

서방의 인권개념 비난

■ 서방의 인권개념은 사회주의체제를 와해시키려는 목적이라고 주장

- 서방의 인권개념은 자본주의를 미화시키고, 사회주의체제를 와해시키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함.
 - “오늘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인권옹호》니, 《인권우위》니 뭐니 하면서 인권유린자로서의 저들의 정체를 감싸고 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한 진보적 나라들을 비방중상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자유와 인권을 위한 자국 인민들의 투쟁을 무마시키며 다른 편으로는 진보적 나라들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는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고있다.”
 -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인권옹호》론은 반동적이고 반인민적인 자본주의사회를 미화분식하기 위한 도구이며 사회주의를 비방·중상하고 말살하기 위한 책동이며 다른 나라의 내정에 란폭하게 간섭하고 타민족의 운명을 룡락하기 위한 정치적수단이다.”(로동신문, 3.25)

■ 미국의 인권보고서가 러시아의 내정간섭이라고 비난

- 북한의 로동신문은 미 국무성이 발표한 인권보고서 『인권과 민주주의』가 러시아의 반발을 샀다고 보도함으로써 미국의 인권정책을 비난함.

- 얼마전 미국무성은 로씨아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인권과 민주주의 실태를 털거한 《인권과 민주주의》에 관한 보고서에 대하여 “이른바 인권, 민주주의 문제를 코에 걸고 로씨아의 내정에 간섭하는 미국의 그릇된 처사는 로씨아의 반발을 자아냈다.”(로동신문, 5.5)

▣ 미국의 대북인권정책이 헬싱키과정의 복사판이라고 주장

- 북한은 최근 미 국무성 북조선인권담당 특사 레프코위쯔가 국회에 제출한 연례보고서가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비난하고 헬싱키과정의 복사판이라고 주장함.
 - “사기와 모략, 협잡의 소굴인 미국에서 splena오는 잡소리들은 어느 것이나 거들떠볼 추호의 여지도 없는 것이지만 레프코위쯔의 녑두리에 내포되어있는 미국의 음흉한 기도에 대해서는 그 교활성과 엄중성으로 보아 국제사회에 똑똑히 밝혀둘 필요가 있다. 미국은 지금 조선반도비핵화과정이 더디여지는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우려 하는 한편 6자회담과정을 이전 쏘련과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을 녹여낸 《헬싱키과정》의 복사판으로 만들려 하고있다. 레프코위쯔가 북조선의 《인권문제》해결이 자유세계의 기본목표의 하나로 되어야 한다느니, 북조선의 《인권개선》은 미조관계개선의 선결조건이라느니 뭐니 하고 떠벌인 것이 그것을 말해주고있다.”(조선중앙통신, 6.11)

2. 일본에 대한 반응

일본의 총련 탄압에 대하여 인권유린이라고 비난

▣ 조선직업총동맹 대변인 효고현상공회 강제수색 규탄

-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는 총련과 재일동포사회를 말살하기 위한 일본반동들의 책동이 극한점을 넘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난함.
 - “왜나라 반동들은 설분위기가 채 가라앉지도 않은 새해벽두부터 수백명의 무장경찰들을 동원하여 또다시 총련의 효고현상공회를 강제수색하고 상공회일군을 체포하는 무지막지한 폭거를 감행하였다. 저들이 떠들어온 이른

바 《법치》와 《인권》의 허울마저 다 벗어버리고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반인륜적이고 비인도주의적인 모략과 폭압소동을 일삼고있는 왜나라 반동들의 음흉한 정치적 속심은 다른데 있지 않다.”(조선중앙통신, 1.14)

■ 청년동맹 대변인 반총련·반조선인탄압 규탄

●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은 18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여 북한의 해외교포조직인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일본의 탄압이 날로 심해지고 있어 선군조선청년들의 적개심을 더욱 격발시키고 있다고 주장함.

- “초보적인 인륜도덕도 국제법도 란폭하게 짓밟으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부당한 테로행위에 매달리는 왜나라 족속들은 진리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의 량심앞에서 응당 피고석에 앉아 시대와 력사의 준엄한 판결을 받고야 말것이다.”(조선중앙통신, 1.18)

■ 조선직업총동맹 대변인 일본의 인권 유린 비난

● 북한은 조선직업총동맹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의 총련 탄압을 인권 유린이라고 강력 규탄함.

- “재일조선인들의 생존권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박탈하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애국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키려고 최후 발악하고 있으니 바로 이것이 국제사회앞에서는 《선진국》, 《문명국》이라 자처하면서 섬나라 안에서는 인권을 인륜을 무참히 란도질하는 깡패행위를 꺼리낌없이 감행하고 있는 일본이라는 실체의 추악한 진면모이며 서로 다른 두개의 낫짝이다.”(조선중앙통신, 1.14)

■ 조선외무성 대변인 성명 일본당국의 총련탄압을 반인륜적 범죄라고 주장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2월 19일 성명을 발표하여 최근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일본당국의 탄압을 반인륜적 범죄라고 규정함.

- “일본공안당국은 올해 2월초까지만해도 10여차례에 걸쳐 중무장한 수백명의 경찰과 장갑차까지 동원하여 총련지부 사무소들과 조선학교들을 포함한 30여개소의 총련관계 시설들과 동포들의 집을 강제수색하고 동포들에게 폭행을 가하며 마구 체포해가는 야수적 폭거를 련이어 감행하였다.”

- “현재 일본령도의 각지에서는 간포 대지진때의 조선사람 사냥을 방불케 하는 살벌한 공포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며 반세기전 일본반동들이 《조련》을 강제해산시키던 때의 파쏘적 광풍이 다시금 몰아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합법적인 해외공민단체인 총련과 우리 민족성원인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야만적인 정치적 탄압은 우리나라의 주권에 대한 참을수 없는 침해행위이며 전대미문의 반인륜적 범죄이다.”(조선중앙통신, 2.19)

▣ 김정일 위원장의 발언을 인용하여 일본의 조총련 탄압을 비난

- 북한은 김정일의 발언 “재일조선국민들의 민족적 권리에 대한 침해는 곧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다른 민족, 다른 나라 국민의 자주적 권리를 억누르며 국제법의 공인된 규범을 짓밟는 이와 같은 침해행위는 용납될수 없는 것이며 지체없이 철저히 청산되어야 합니다”라고 인용하며 조총련 탄압을 비난하였음.
-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왜나라 반동들의 무분별한 탄압, 야만적인 인권침해행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있다.”(로동신문, 3.5)

▣ 유엔북한대표 재일조선인 탄압, 인권유린은 중지되어야 한다고 주장

- 북한은 북한대표가 3월 28일 유엔인권이사회 제4차 회의 인종주의, 인종차별 반대특별보고자 보고서 토의 시 한 연설에서 일본의 재일 조선인 인권유린을 비난함.
- “그는 인종주의, 인종차별반대특별보고자가 보고서에서 일본에 사는 조선사람들이 특별히 탄압과 차별을 당하고 있는 실태를 문제시하고 그 시정대책을 제시한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언급하였다.”(조선중앙통신, 4.5)

▣ 일본에 유괴되어갔던 도추지여성 기자회견

- 북한은 일본에 유괴되어 갔다가 귀화하였다고 주장하는 북한여성 도추지가 12일 평양고려호텔에서 기자들과 회견문을 통하여 일본의 조총련 탄압문제를 비난함.
- “지금 일본에서는 《랍치문제》, 《인권문제》 등에 대해 떠들면서 우리

공화국을 비방중상하고 총련을 모해하는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조선중앙통신, 7.12)

■ 일본의 만경봉호 입항금지에 대하여 반인륜적·비인도적 범죄행위라고 비난

● 북한은 최근 일본이 《만경봉-92》호 등 북한 선박들에 대한 일본입항금지를 비롯하여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6개월간 더 연장할것을 결정하고 국회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그것을 정식 통과시켰다는 사실에 대하여 반인도적 처사라고 비난함.

- “세상사람들로부터 저속하기 그지없는 정치난쟁이로 조소와 비난을 받고 있는 일본반동들이 제아무리 《제재》니, 《봉쇄》니 하고 목이 터지게 떠들어대도 우리는 그것을 달보고 짓는 개소리만큼도 여기지 않는다. 그따위 비렬하고 가소로운 놀음을 백번천번 벌려놓는다고 하여 눈섭 하나 까딱할 우리 인민이 아니다. 하지만 재일동포들의 조국왕래를 비롯한 인도주의적 인 사명을 수행하는 《만경봉-92》호의 일본입항금지조치를 또다시 연장하기로 한데 대해서만은 결코 스쳐지나 보낼 수 없다.”(조선중앙통신, 6.6)

■ 외무성 대변인성명 아베일당의 총련탄압을 민주주의적 민족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비난

● 북한은 7월 1일 외무성 대변인은 성명에서 일본 아베정부의 총련 탄압을 민주주의적 민족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비난함.

- “최근 아베일당의 총련 탄압 책동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가장 무모하고 악착한 지경에 이르고있다. 조선사람들에 대한 적의가 골수에까지 차있던 조상들로부터 국수주의와 민족배타적인 기질을 물려받은 아베는 반공화국 적대의식을 고취하여 수상자리에 들어앉은 이래 반공화국, 반총련소동을 계단식으로 고조시켜왔다.”

- “이것은 재일조선인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의 옹호자인 총련의 활동거점을 물리적으로 제거하여 총련과 재일조선인활동을 말살하려는 책동으로서 역대 일본의 그 어느 정권도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한 우리 공화국에 대한 흉악한 주권침해행위이다.”(조선중앙통신, 7.1)

일본의 과거 징병, 징용, 위안부 문제 비난

▣ 조선외무성 대변인 성명 일본의 과거사 거론하며 총련 탄압을 비난

- 북한은 조선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의 과거사를 거론하며 총련 탄압을 비난함.
 - “재일조선인들로 말하면 지난 시기 징병, 징용, 위안부 등의 각종 명목으로 강제로 일본에 끌려가 무제한한 랍탈과 착취, 노예적 고역과 굴종을 강요당한 직접적인 피해자들과 그 후손들로서 일본당국은 마땅히 그들을 보호해야 할 역사적·도의적 책임을 지니고 있다.”
 - “특히 전범자의 후손으로서 그 책임당사자의 한 사람인 아베가 조상대대로 조선사람들에게 저지른 죄과에 대하여 누구보다 철저히 사죄하고 응당한 보상을 할 대신 자기 집권기간에 감히 총련을 없애보려는 야욕을 품고 이 모든 범죄소동의 앞장에 서서 날뛰고 있는데 대하여 우리는 특별히 주목하지 않을수 없다.”(조선중앙통신, 2.19)

▣ 조선인납치, 강제연행죄악은 절대로 덮어버릴 수 없다고 비난

- 북한은 『로동신문』 논설 《조선인납치, 강제연행 죄악은 절대로 덮어버릴 수 없다》를 통하여 일본의 조선인 납치, 강제연행 행위를 비난함.
 - “지금 왜나라 반동들은 그 무슨 《납치문제》를 계속 떠들어대면서 과거에 저지른 조선인납치, 강제연행 죄악을 은폐, 무마하려고 비렬하게 책동하고 있다.”
 - “얼마전에도 일본총무성은 NHK방송에 2007년에도 계속 《납치문제》를 중점항목으로 취급할 것을 지시하였다. 세계가 인정하는바와 같이 일본군 《위안부》범죄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다. 일제는 관권과 군권을 발동하여 10대의 소녀로부터 유부녀에 이르기까지의 20만명에 달하는 조선여성들을 닥치는 대로 납치, 유괴, 강제연행하여 일본군성노예로 끌어갔다.”(로동신문, 3.31)

3. 남한에 대한 반응

보안법을 반인권적 악법이라고 주장

▣ 민화협 대변인 보안법을 무조건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

- 북한은 1월 16일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여 보안법 철폐를 주장함.
 - “최근 남조선공안당국은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강순정을 《보안법상 간첩혐의》라는 구실로 구속기소한데 이어 지난 10일에는 우리 공화국을 찬양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죄아닌 《죄》명을 씌워 《민주로동당》 당원 2명을 구속하는 파썸적폭거를 감행하였다.”
 -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로 나가는 이 력사적시대에 동족을 찬양하고 동족과 만나 통일문제를 논의하였다고 하여 《간첩》, 《리적》의 감투를 씌워 탄압하는 것이야말로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할 수 없는 반력사적, 반민족적범죄행위이다.”(조선중앙통신, 1.16)

▣ 조평통 대변인 《보안법》철폐, 반 《한나라당》 투쟁의 결함을 호소

-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2월 9일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고, 보안법 철폐, 한나라당 반대를 주장함.
 - “최근 남조선에서는 파썸적인 《보안법》에 의해 통일애국인사들과 진보개혁세력을 비롯한 각계층 인민들이 련이어 《용공리적》, 《간첩》의 혐의를 쓰고 탄압, 처형당하는 엄중한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 “지난해 말과 올해에 들어와 《전교조》, 《한총련》, 《범민련 남측본부》, 《민주로동당》 등의 전, 현직 간부들을 비롯한 수십명이 《북의 선군정치와 정치체제를 찬양》하고 북과 접촉하였다는 죄아닌 《죄》로 《보안법》에 걸려 체포구속되었으며 지어 《간첩》의 루명까지 쓰고 가혹한 조사를 받고있다.”(조선중앙통신, 2.10)

▣ 로동신문 《보안법》은 평화통일의 장애물이라고 주장

- 북한은 《로동신문》을 통하여 낡은 시대의 대결관념을 털어버리고 자주통일

위업을 힘차게 전진시켜 나가자면 결정적으로 남조선에서 반통일파썸악법인 《보안법》부터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함.

- “보안법은 북남대결을 제도적으로 고취하는 악랄한 반민족, 반통일악법이며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차단함으로써 나라의 통일위업실현을 방해하는 극악한 반통일악법이라는데 대해 폭로하였다. 본설은 《보안법》의 칼날아래 지금 남조선에서는 과거독재시대를 방불케 하는 폭압분위기가 조성되고있으며 《북에 리로운것은 남에 해롭다》는 대결시대의 관념이 머리를 쳐들고 사회적 진보와 나라의 통일위업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조선중앙통신, 2.20)

■ 해외동포 남조선인민들의 《보안법》 철폐투쟁을 지지

● 북한은 해외동포 남조선인민들의 《보안법》 철폐투쟁에 지지를 표시한다는 성명을 발표함.

- “끼르기즈스탄 고통련은 3월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남조선에서 친미 보수 세력들이 조국통일을 위해 떨쳐나선 애국적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을 파썸악법인 《보안법》에 걸어 무참히 탄압하고 있는데 대해 언급하고 《보안법》 철폐투쟁은 남조선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 “해외동포들은 《보안법》철폐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언제나 남조선인민들의 편에 서있을 것이다.”(조선중앙통신, 3.24)

■ 친북사이트 차단을 “인권에 칼질하는 파썸폭거”라고 비난

● 북한은 4월 3일자 《로동신문》을 통하여 친북 사이트 차단을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함.

- “지난 3월 26일 남조선군 《기무사령부》(《기무사》)가 《북의 선군정치와 련방제통일의 당위성을 선전》한다고 하여 인터넷홈페이지 32개를 《친북사이트》로 규정하고 차단하는 놀음을 벌린것이 그 한 실례이다. 이것은 6.15통일시대에 배치되는 또 하나의 반통일적행위이며 인류문명의 산물인 정보통신을 향유할 인민들의 초보적인 권리마저 짓밟는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파썸폭거이다.”(조선중앙통신, 4.3)

한나라당을 반인권적 집단이라고 비난

■ 조선학생위원회 대변인 박종철 고문사건 20주년 담화에서 한나라당 비난

- 북한은 조선학생위원회 대변인 명의로 1월 14일 담화를 발표하여 박종철 고문사건 20주년에 대한 논평을 하면서 남한의 반인륜적 고문학살이라고 비난하고 그 책임자는 한나라당이라고 주장하면서 한나라당을 극렬히 비난함.
 - “군부독재집단에 뿌리를 두고 그들의 살인도구를 그대로 넘겨받은 것은 다름아닌 《한나라당》이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의 피로 얼룩지고 추악한 범죄로 가득찬 역적당인 《한나라당》은 지금 옛 시절을 꿈꾸며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에서 기어이 《정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피눈이 되어 날뛰고 있다.”
 - “《한나라당》이 집권하게 되면 남조선청년학생들은 또다시 파쇼독재의 사슬에 매여 제2, 제3의 박종철이 될수 있으며 6.15공동선언의 기치따라 통일의 세대로 살려는 그들의 희망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한나라당》에는 그 어떤 환상도 기대도 가지지 말아야 한다.” (조선중앙통신, 1.14)

■ 반제민전 중앙위원회 보안법 철폐와 한나라당 반대투쟁에 펼쳐나설 것을 호소

- 북한은 《구국전선》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가 2월 20일 발표한 《전국민에게 보내는 격문》을 발표하여 보안법 철폐 투쟁과 한나라당 반대투쟁에 나설것을 선동함.
 - “남조선인민들이 《보안법》을 되살려 《정권》을 찬탈하려는 친미보수세력의 발악적 책동에 준엄한 철추를 내리고 반통일파쇼악법인 《보안법》을 매장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펼쳐나설 것을 호소한다. 《보안법》철폐를 결사반대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6.15지지세력》을 척결해야 한다》고 피대를 둔구어온 《한나라당》역적들은 지금 어떻게 하나 이 악법을 되살려 진보개혁, 통일애국세력을 말살하고 올해 《대통령선거》(대전)에서 기어이 권력을 강탈하려고 최후 발악하고있다.”
 - “《한나라당》이 권력을 잡게 되면 우리 민중이 것처럼 바라던 《보안법》철폐문제는 영영 날아나고 피비린 파쇼탄압속에 무수한 선혈을 뿌리며 쟁

취한 초보적인 민주화의 열매도 강탈당하게 될 것이며 온 겨레에게 통일의
락관과 희망을 안겨주는 6.15시대의 귀중한 성과물들은 하루아침에 빛을
잃게 될 것이다.”(조선중앙통신, 2.22)

▣ 반인권범죄집단을 단호히 징벌해야 한다고 주장

- 북한은 3월 16일자 《로동신문》을 통하여 최근 남조선에서 과거 파쇼독재《정권》시기 반민족적이고 반인권적인 범죄사건들의 진상이 연이어 드러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반인권범죄집단을 단호히 징벌해야 한다고 주장함.
 - “《한나라당》이야말로 수십년간의 과거사를 파쇼와 독재로 어지럽히고 반인권범죄의 산을 쌓아온 악명높은 파쇼독재의 본거지, 범죄집단이다. 파쇼독재자들은 바로 《한나라당》조상들과 그 족속들이었으며 《한나라당》족속들처럼 추악한 정치적야욕을 위해 대물림을 해가면서 자기 동족과 자기 인민을 파쇼독재와 권력유지의 제물로 서슴없이 만든 범죄집단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다.”(조선중앙통신, 3.16)

4. 분석 및 평가

▣ 종합평가

- 북한은 미국, 일본, 남한의 북한 인권문제 비판에 대하여 오히려 미국, 일본, 남한의 인권문제를 들추어내어 역으로 비난하는 맞대응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 미국의 대테러전쟁에서의 인권문제 비난
 - 일본의 조총련 탄압, 납치자 문제 등에 나타난 인권문제 비난
 - 남한의 박종철사건, 보안법 문제 비판, 한나라당 비난 등
- 이러한 사실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문제에 압력을 가하는 것에 대하여 북한이 매우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미국에 대한 반응

- 미국이 북한에 대하여 경제제재, 핵문제 및 미사일 문제에 대한 압박, 인권문제 제기, 불량국가, 악의 축, 학정의 전초기지 등 여러 가지로 적대정책을 추

진하고 있는데 대하여 대응하여 북한은 인권문제의 측면에서 미국을 비판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그런데 금년 2월 13일 6자회담에서 미국과 핵문제 해법에 합의를 이루었고, BDA 금융제재 문제까지 해결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하여 금년 상반기에는 미국에 대한 적대감이 상당히 완화된 추세를 보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국에 대하여 인권문제 관련 사항을 제기하면서 지속적으로 비난을 쏟아내고 있음.
- 북한이 미국에 대하여 행하는 비난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은 세가지 내용으로 요약됨.
 - 주로 미국이 대테러전쟁의 일환으로 벌이는 이라크전쟁 과정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인권유린 사항
 - 미국내에서 벌어지는 인권유린 사항
 - 서방식 인권 개념에 대한 비판

■ 일본에 대한 반응

- 북한의 미국에 대한 비난은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일본에 대한 비난은 강도와 빈도에 있어서 매우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일본의 아베정부가 북한의 납치자 문제를 빌미로 6자회담에 소극적이며, 조총련을 탄압하고 있는 등의 대북강경책에 대하여 북한은 인권차원에서, 반인륜적인 처사라고 비난을 가하고 있음.
 -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집단·단체, 해외단체의 성명의 형식으로, 연일, 반복적으로 일본을 비난하고 있음.
- 북한의 일본에 대한 비난은 주로 다음의 두가지 내용으로 요약됨.
 - 조총련 탄압에 대한 비난
 -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비난

■ 남한에 대한 반응

-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는 비난의 빈도와 강도가 과거에 비해 많이 완화되었으나 보안법을 반인권적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철폐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

고 있음.

- 금년말의 대선을 의식하여 한나라당에 대한 비난과 반대투쟁의 빈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 특징임.

인도주의 사안



| | |
|-------------|----|
| 1. 탈북자 | 41 |
| 2. 납북자·국군포로 | 46 |
| 3. 이산가족 | 51 |
| 4. 기타 | 52 |
| 5. 분석 및 평가 | 53 |

1. 탈북자

두리하나선교원 중국서 방치된 탈북여성 출산 자녀들 5천명~1만명 추산 (1.8)

- 탈북여성이 입국시 동반하지 못하고 중국에 남겨져 고아로 버려지는 탈북2세대들은 ‘무국적 고아’로 방치될 수 있음.
 - 일부는 어디에도 호적 기록이 없어 심각한 상황임.

휴먼라이츠워치 탈북자 인권실태 심각성 제기(1.11)

- 중국은 탈북자 유입을 막는 데만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은 북한정권의 붕괴를 막는데 신경 쓰느라 억압당하는 북한주민들 문제를 사전에 막으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

미 국무부 난민담당차관보 탈북자 정착허용계획 발표(1.17)

- 엘렌 사우어브레이 미 국무부 난민담당차관보는 ‘세계 이주민, 난민의 날’을 맞아 조지타운대에서 미국입국을 희망하는 탈북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더 많은 규모에게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힘.
 - 미국은 제3국에서 미국행을 희망하는 탈북자들에게 누구든 망명을 허용할 계획이며,
 - 다만 경유국들이 미국행 희망탈북자들에게 출국을 허가해 줄 것인지가 관건이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힘.

주중 공관체류 탈북자 심각한 정신장애 경험(1.22)

- 하나원이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에게 제출한 ‘베이징·선양 영사관 해외출장 결과 종합보고’ 자료에서 영사관 내 탈북자 120여명을 대상으로 한 심리검사 (2005~2006, 상반기)에서 심각한 수준의 정신적 외상(Trauma) 발견
 - 베이징 영사부(2006.3) 조사에서 조사자 30명 중 50%가 심각한 정서적 장애 호소

- 베이징 영사부(2005.5) 조사에서 56명중 32%(18명)가 우울증세 등 정신병리적 수준의 증상을 보임.
- 선양 영사부(2005.11) 조사에서 조사자 30명 중 23%(7명)이 전쟁을 경험한 퇴역군인 수준의 스트레스 장애 경험
- 체류 6개월 미만자는 심리적 고통의 신체화(두통, 위장장애, 근육통 등) 증상 호소
- 1년 미만의 탈북자는 극도의 불안감, 무력감, 우울증 경험
- 1년 이상 체류자는 실어증, 대인기피, 자살충동의 증세를 보임.
- 이와 같은 정신적 외상은 동료나 가족 죽음 목격(62%), 생명위협 정도의 질병경험(50%)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영사관 내 시설 확충, 심리상담사 배치 등 치료프로그램의 필요

북중 간 체포 탈북자 명단 즉시 통보 1998년 협정 공개(1.23)

- 북한 국가보위부와 중국 공안부가 1998년 7월 체결한 ‘국경지역에서 국가의 안전과 사회질서 유지 사업에서 호상 협조할데 대한 합의서’(10조 35개항)에 따르면, 1986년 8월 체결합의서 내용 중 ‘상황에 따라’ 상대방에게 넘겨주도록 했던 불법 월경자의 명단과 관련된 자료를 ‘즉시’ 넘겨주도록 내용 변경
 - 압록강과 두만강을 ‘공동경비구역’으로 설정하되, 경비 편의를 위해 자국 국경과 가까운 구역은 쌍방이 각각 책임지기로 합의
 - 월경자가 여권이나 통행증 등 정상적인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어도 규정된 출입국 검사기관과 경로를 통해 입국하지 않았을 경우 불법월경자로 간주하기로 합의
 - 재해와 정신병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월경했을 경우 불법월경자로 간주하지 않음.

탈북자 신원공개 피해 인권위 진정(1.25)

- 일가족 4명과 입국(2006.3.18)한 이모씨(38)가 합동조사 이전에 본인 신상에 대한 보안유지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북사실과 인적사항(가명, 나이, 직업, 군복무시기, 탈북경로, 가족관계)이 노출되어 북측 가족들이 피해(행방 불명)를 입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 인권위는 경찰이 탈북자 처리규정에 따른 비공개 원칙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강원지방경찰청에 기관경고, 홍보담당자 경고 조치 권고 결정

북한경비대 20명 집단탈북 추정 보도(2.5)

- 북한전문 인터넷 신문인 데일리엔케이는 북한내부 소식통을 인용 함북 회령 지구 국경경비대 1개 소대원 20명 가량이 중앙당 활동 검열단의 체포를 피해 중국으로 집단 탈출했으며, 인민무력부와 국가안전보위부로 구성된 합동체포조가 중국에 급파되었다고 보도
 - 탈북 경비대원은 중앙당 검열과정에서 탈북방조혐의가 드러난 사람들로, 동일 부대 소속은 아닌 것으로 설명
 - 사형예정인 국경경비대 초소장, 부소대장과 관련 있는 군인들로 대부분 무기를 휴대하지 않은 채 탈출한 것으로 추정
 - 한국으로 도주가능성이 있어 체포과정에서 반항할 경우 사살명령 하달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 동남아 대표 지역인권보호체제 필요성 언급(2.6)

- 호마운 알리자데 대표는 제2차 아시아인권포럼에서 많은 탈북자들이 중국을 거쳐 동남아에 체류하고 있으나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임을 밝히면서, 동남아지역 인권보호체제가 마련되면 성착취와 이주노동자 인권보호는 물론 탈북자 및 북한인권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지역인권보호체제 설립을 촉구

태국 체류 탈북자 3명 난민 자격 미국 입국(2.10)

- 출국 허가를 받은 태국 체류 탈북자 16명 중 여성 3명이 난민지위로 미국 입국하였으며, 이들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태국사무소를 통해 난민신청했던 탈북자중의 일부임.
 - 미국은 탈북자들의 신변안전을 우려 도착경로 및 체류장소 보안유지
 - 나머지 미국 입국 희망자에 대해서도 조속한 처리 입장 표명

국내입국 탈북자 1만 명 돌파(2.16)

- 국내입국 탈북자가 2월 16일자로 10,006명으로 만 명을 넘게 되었다고 통일부가 공식 발표

AI 탈북도운 북한군 2명 처형 위기 보도(2.19)

- 국제사면위원회는 웹사이트에 북한주민의 탈출을 도운 북한군 2명에 대한 처형이 1월 중순에 집행될 예정이었으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5세 생일인 2월 16일 이후로 연기된 상태라고 밝힘.
 - 함북 회령의 북한군 초소장과 부초소장으로 탈북관련 조사를 받다가 체포
 - 2006년에도 최소 70명이 탈북관련 총살형이나 교수형을 당했으며, 일부는 공개처형된 것으로 발표

태국 탈북자 52명 연행 조사(4.2)

- 태국 경찰은 태국 북부 라오스-미얀마 접경지역인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서 탈북자 52명을 검거 조사 중이며, 이들을 치앙라이 지방법원으로 이송 및 입국죄로 처벌한 이후 북한으로 추방할 방침으로 밝힘.

중국 경찰 라오스 접경지역에서 탈북여성 6명 체포(4.1)

-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공안국 산하 출입국관리국 경찰은 윈난성 장흥시에서 현지경찰의 협조를 받아 칭다오를 출발하여 한국행을 시도하려 이동했던 탈북 여성 6명과 중국인 2명을 체포함.
 - 주모자가 한국인이고 미얀마 거주사실을 확인하고 미얀마 당국에 체포를 요청하여 신변인수

벨기에 탈북자에 난민지위 부여(4.4)

- 벨기에 정부 산하 난민위원회의 크리스토프 엔슨 대외협력국장은 RFA와의 인터뷰에서 2006년 3명의 탈북자가 난민지위를 신청했고 이 중 2명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했다고 밝힘.

-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며,
- 2007년에도 2월말까지 2명의 탈북자가 추가로 난민지위 신청
- 벨기에 당국은 난민지위 신청자가 북한국적이라는 확신만 들면 대부분 난민지위를 부여한다는 입장

태국 수감 탈북자 400명 한국행 요구 단식농성(4.24)

- 탈북난민 강제송환저지 국제캠페인(사무총장 이호택)은 태국 이민국 수용소에 수감된 탈북자 420여명이 조속한 한국행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 보도
 - 남성 100명, 여성 324명
 - 한국입국예정이던 탈북자 20여명이 이민국의 출국 승인을 받지 못했던 것이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짐.
 - 한국행 재개 설득으로 이틀 만에 단식농성 해제

라오스 수감 탈북청소년 3명 한국입국(4.26)

- 2006년 11월 라오스 국경을 넘다 경찰에 체포되어 수감중이던 최향, 최혁, 최향미가 미국행을 희망하였으나, 라오스 정부가 석방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신분보장에 미국측이 난색을 표함에 따라 한국행 선택

AI 2007 인권보고서 중국 내 탈북자 실태 지적(5.23)

- 국제사면위원회는 중국 내 10만 여명으로 추산되는 탈북자가 있으며, 매주 150~300명이 북한으로 송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탈북일가족 4명 일본 입항(6.2)

- 북한일가족 4명(부부, 아들 2명)이 목선을 타고 5월 27일 북한 청진을 출발 일본 아오모리현 후카우라초 항구에 도착 한국행 요청
 - 생계가 어렵고 인권이 열악하여 북한을 탈출했다고 밝힘
 - 북한 화물선 만경봉호 입항지인 니가타 항을 목표로 출발하여 표류하다 발

- 전 일본 당국 조사과정에서 각성제 소지사실이 발각
- 밀매의도가 없다고 판단 기소유예 처리 후, 항공편으로 한국 입국(6.16)

2002년 중국 강제북송 탈북자 규모 4,809명 공개(6.9)

- 정신저(鄭信哲)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이 학술지 중남민족 대학저널에 기고한 ‘한반도 정세가 조선족 지역 발전과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에서 2002년 중국이 연변 조선족 자치주를 통해 북송한 탈북자가 4,809명에 달한다고 공식통계 인용 발표
-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직접 체포해 북송한 불법 월경자는 3,732명이며, 당해에 북한을 탈북한 탈북자가 2,040명, 이전 탈북자가 1,692명
- 룡징시의 경우 북송 탈북자가 2000년 675명, 2001년 1,349명에 달함.
- 인용통계는 연구원이 2003년 현지 실태조사과정에서 입수

일본지원단체 일본정착 탈북자 국적상태 조사(6.13)

- 일본탈북지원단체가 2006년 2월 일본정착허용 탈북자 130여 명 중 82명의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한 결과 24명이 무국적 상태이며, 나머지는 일본 국적을 취득했거나 ‘조선적’으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남.
- 일본 입국 관리당국은 한반도 출신은 ‘조선적’으로 명기한다는 1971년 방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등록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국적 등록업무를 하는 지자체들은 ‘탈북자는 여권 등 신분인증 서류를 소지하지 않기 때문에 국적불명자’라며 ‘무국적자’로 처리
- 국적불명자로 처리된 탈북 일본인 처는 국적이탈자료가 있어 일본국적 취득 용이

2. 납북자·국군포로

납북 어부 최옥일 탈북 후 중국에서 가족상봉(2006.12.31~2007.1.2)

- 1975년 7월 동해상 조업(천왕호) 중 북한경비정에 납치되었다가, 1976년 7월

함북 김책시 풍년리 남새밭 농장에 배치되었던 최옥일(67)이 부인 양정자(66)를 31년 만에 중국에서 상봉

- 부인은 자녀 넷을 키우다, 1978년 사망신고
- 1998년 남편의 생존사실을 득문하고 납북자 가족모임에 도움을 요청
- 남편은 1979년 북한여성과 결혼하여 두 자녀를 뒀.
- 천왕호 선원으로 억류되었던 33명 중 2명(고명섭, 최옥일) 탈북으로 나머지 31명은 북한에서 사망하거나 생존

납북자가족협의회 송환촉구 호소 노란 손수건 달기(1.4~1.15)

- 납북자가족협의회(회장 최우영)는 납북자의 송환을 바라는 간절한 희망을 담아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 망배단 옆 소나무에 노란 손수건 달기 추진

한·중 외무장관 납북어부 처리 협력 합의(1.12)

- 아세안+3 정상회의와 EAS(동아시아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송민순외무장관의 최옥일 조속한 귀환요청에 대해 중국 리자오싱 외교부장이 협력 약속
 - 중국 내 관련 법절차를 최대한 단축토록 노력할 것임을 확인

탈북 국군포로 가족 9명 복송(1.12)

- 월간조선(1월호)은 국군포로 3명의 가족 9명이 탈북(2006.10)하여 주 선양한국총영사관 관계자에 인도되었지만, 영사관 진입 전 영사관 직원이 주선한 민박집 투숙 중 출동한 공안당국에 체포되어 복송(2006.10.11)된 것으로 보도
 - 정부 당국자는 국군포로나 납북자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중국 당국에 의해 출입국관련법을 위반한 탈북자 취급을 받기 때문에 총영사관측이 공관내부 진입을 주선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해명
 - 납북자가족모임은 이중 한명(국군포로의 손자, 23세)이 한국행을 요청하며 영사관에 보냈던(2006.7.18) 편지를 공개

남북어부 최육일 국내 입국(1.17)

- 탈북(2006.12.25)후 중국 선양 한국총영사관의 보호를 받아 온 최육일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 자녀 3명 및 부인과 상봉 후, “한국 정부가 31년 만에 국민으로 다시 인정하고 받아줘서 무한한 영광”이라고 소감 표명

북송 국군포로 가족 1명 사망 추정(1.19)

- 남북자가족모임은 현지인의 제보인용 강제북송된 국군포로 가족 9명 중 1명이 보위부 조사과정에서 동사했다고 주장
 - 숨진 70대 할머니는 국군포로의 부인인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가족의 행방은 알 수 없다고 밝힘.
 - 가족 전원이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지는 않았으며, 일부 노약자는 귀가 조치한 것으로 파악

북한당국 국군포로 최육일 탈북 도우미 색출활동 강화(1.22)

- 자유북한방송은 대북소식통을 인용 최육일 탈북도우미를 색출하기 위해 국가보위부 요원들을 함북 회령시에 파견해 수사를 벌이는 한편 신고자를 보위부 정식직원으로 채용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고 보도
 - 최근 국경경비 담당 경비대원들에게 실탄을 장전하고 탈북자 발견 시 현장 발포 명령 하달한 국경경비 강화 분위기 설명

한·중 외무장관 ‘북송사건 재발 방지’ 합의(1.26)

- 중국을 방문한 송민순 외무장관은 한·중은 국군포로나 납북자, 그 가족의 북송재발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자는 데 묵시적 합의 사실 공개

한나라당 ‘국군포로 가족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계획 발표(1.28)

- 대변인은 진상규명과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조사

를 요구할 것임을 발표

- 당내 진상조사단을 중국에 보내 사건조사활동을 벌였으나, 총영사관의 제한된 답변과 자료제출 요구 거부 등 불성실한 태도로 국정조사를 통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힘.

미 국방부 비밀해제 문서 국군포로 소련압송 공개(4.11)

- 미 국방부는 『한국전쟁 포로들의 소련이동』이란 보고서의 비밀해제
 - 냉전종식이후 한국전쟁 미군포로 유해발굴·반환을 위해 미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설립한 ‘미·러 합동 전쟁포로 및 실종자 위원회’가 1993년 8월 작성
 - 강상호 전 북한내무성 부상 겸 군총정치국장은 1992년 11월 “수천명의 국군포로들을 소련 내 ‘타이가’ 지역 등의 300~400개 수용소로 이동하는 것을 지원”했다고 진술
 - 미국 1953년 5월 동 문제를 보도한 ‘에스콰이어’지의 이그먼트 나고스키 기자는 소련 내무부 요원 2명과 ‘시베리아 횡단철도’ 직원에게 입수한 정보를 근거로 국군포로의 소련 압송경로와 현지 생활상을 진술
 - 포로들은 1951년 11월~1952년 4월 기차로 북한과 소련 국경인 포시에트를 거쳐 몰로토프로 옮겨지거나, 베로 오호츠크 등 소련 극동 항구를 거쳐 콜리마 수용소와 추크치해의 반카렘으로 이송
 - 스탈린은 1952년 9월 주은래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에서 “유엔군 포로의 20%를 인질로 잡아놓자”고 제안
- 미 육군 한국정보활동 연합사령부(CCRK)의 첩보보고서(#J-1720, 1953년 1월 5일자)는 중앙노동당 명령에 따라 정치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2만 명의 죄수들이 북한 내 여러 감옥에서 1952년 9월 중순 카스피해 인근 우라기로 이송됨.
 - 10월 초에 러시아의 우랄루 전력발전소의 노동자로 이송됨.
 - 죄수 중에는 북한이 서울 점령 당시 납치한 인원을 확인할 수 없는 민간인들과 6,000명으로 추정되는 국군포로들이 포함된 총 2만명으로 강제노역에 동원됨.

납북자 및 국군포로 제15차 이산가족 상봉 참여(5.9~11)

- 1968년 납북 대성호 선원 김홍균이 남측 어머니(이동덕)와 형제 상봉
- 북측 부인(고순희)도 동참
- 전시납북자 정용진(51년)의 북측 자녀와 남측 형제, 이양우의 경우 양 측 가족이 월북이나 납북이냐를 두고 설전을 벌임.

납북자가족모임 탈북납북어부 공관보호 사실 발표(6.18)

- 납북자가족모임(대표 최성용)은 1975년 동해상 조업중 납북된 천왕호 선원 이한섭(59)이 5월 19일 평남 회창의 집을 떠나 26일 두만강을 건너 6월 15일 공관 진입 보호 중이라고 밝힘.

탈북자 강제북송중지 부산 중국영사관앞 기도회(6.18)

- 부산기독교사회책임(공동대표 김성수 고신대 총장) 주관 부산 해운대구 우동 중국영사관 앞에서 수영로교회와 온천교회 신도 100여명이 기도회
- 탈북자의 안전과 강제북송 저지, 탈북자의 난민지위 확보 촉구
- 중국 후진타오 주석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영사관측의 거부로 무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납북어부 간첩사건재심 권고(6.20)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의혹 사건’과 조총련 대남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간첩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차풍길 간첩조작의혹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가에 재심 등의 후속조치 권고
- 1978년 부안경찰서가 납북 후 송환된 강대광 등 6명을 연행 10~39일 동안 불법 감금하고 전기고문과 잠 안 재우기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발표
-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경찰의 불법행위를 인지했음에도 수사하지 않고 경찰의견서를 작성, 기소했으며, 전주지법은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하여 수사 기관에서의 자백을 근거로 유죄판결을 내린 것으로 지적
- 사법부가 위헌적 요소가 있는 국가보안법 찬양고무 조항 등을 자의적으로

확대 적용해 강대광에게 자격정지 10년이라는 중형 선고 등 기본권보장 책무위반

- 차풍길이 1982년 일본으로 가서 조총련 사람과 접촉, 포섭돼 국가기밀을 수집했다는 첩보 보고만으로 안기부가 수사에 착수하여 66일 간 불법 구금, 구타, 물고문 등 가혹행위 규명
- 위원회는 서울지법이 증거재판주의를 위반 차풍길에게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지적

3. 이산가족

독일여성 강제소환 북한남편과의 상봉 독일적십자사에 요청

- 레나테 홍(69)이 1961년 북한당국에 의해 강제소환된 남편 홍옥근(1934년 생)의 생사확인 및 상봉을 독일 적십자사에 요청
 - 독일적십자사가 2007년 1월 말 직원 두 명을 북한에 파견하여 북한적십자사와 논의예정
 - 독일외무부도 베를린 주재 북한대사관에 협조 요청
 - 독일주재 북한대사(홍창일)가 레나테 홍의 청원편지를 접수 평양 전달확인
 - 독일적십자사 심인사업부는 홍창일이 북한에서 재혼하여 함흥에서 가족과 살고 있다고 확인 통보

제20차 남북장관급 회담 이산가족 상봉 재개 합의(3.2)

- 남북은 장관급회담에서 이산가족 면회소 실무접촉(3.9), 제5차 이산가족 화상상봉(3.27~29), 제8차 적십자회담(4.8~12), 제15차 이산가족 대면상봉(5월 초)에 합의함.
 -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공사재개(3.21)
 - 화상상봉 시설지원비로 약 40만 달러(3억 8,000만원) 현금지원, 평양화상상봉센터 신축자재·장비 및 물품비용 35억원 지원요구 수락

제15차 이산가족 순차상봉(5.9~14)

- 2차례에 걸친 순차상봉을 통해 남측과 북측의 이산가족 100명과 가족들이 상봉에 참여
 - 1진 상봉 시 남측 98가족이 요청한 북측가족 228명 상봉참여
 - 2진 상봉 시 북측 100가족이 요청한 남측가족 487명 상봉참여

4. 기타

북측 자진월북 어부를 남측에 인계(1.12)

- 북한은 오징어잡이 어선(우진호)를 타고 지난 달 동해상으로 월북한 이모 씨(46세)를 남측에 송환
 - 월북 당시 20인분의 식량과 36시간 운행 경유 탑재 월북
 - 북측은 ‘동포애와 인도주의’를 강조

북한체류 월북 미군 ‘북체제 홍보’ 영상 출연(1.23)

- 북한에서 생활하고 있는 미국인 제임스 드레스녹(66)이 미국 유타주에서 열린 전세계 독립영화인 축제인 선댄스 영화제(1.18~29)에서 ‘푸른눈의 평양시민’에 출연
 - 1960년대 월북한 미군 4명 중 1명으로 북한으로 탈영(1962.8)
 - 1978년 ‘이름 없는 영웅’에 출연 노동당원 자격 획득

루마니아 신문 1978년 루마니아여성 납북 사실 보도(3.22)

- 루마니아 에베니멘툴 질레이(Evenimentul Zilei) 신문은 1978년 10월 로마에서 실종된 루마니아 여성 뫼베아(Doinea Bumbea, 당시 27세)가 북한에 의해 납치되었던 것으로 보도
 - 북한다큐멘터리를 본 가족들이 미국 탈영병 출신 드레스녹과 결혼해 살다가 97년 사망한 것으로 확인

- 2005년 미군 탈영병 로버트 쟈킨스도 일본인 납북자 아내의 증언을 통해 납북된 루마니아 여성 ‘도이나’에 대해 증언
- 가족들이 루마니아 정부와 평양주재 루마니아 대사관 영사과에 가족(가브리엘 드레스늑) 상봉 요청

5. 분석 및 평가

국제사회의 탈북자 인권 침해상황에 관심 지속

- 국제사면위원회, 휴먼라이츠워치 등 국제인권단체와 국내민간단체들의 해외 체류 탈북자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 발간이 지속됨.
 - 강제송환 탈북자들의 위험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촉구
 - 미국자유주간 등을 통해 제3국 및 북한에서의 탈북자 인권침해실태에 대한 탈북자 증언 지속
 - 1998년 북중 합의서에 따라 탈북자 명단의 즉시 송부가 제도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이 지속된 사실이 공식통계로 밝혀짐.

탈북 납북자 및 국군포로 입국처리 제도화 필요성 부각

- 최옥일 입국과정에서 입국협조를 요청받은 한국 총영사관측의 처리 미숙과 국군포로 가족들의 강제복송사건으로 인한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일반 탈북자와 별도로 납북자 및 국군포로의 입국과정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화 필요성이 제기됨.
 - 한·중 외무장관 회동 등을 통해 양국간 협력을 재확인

미국의 해외체류 탈북자 수용 증가

- 미국은 태국체류 탈북자들 중 미국 내 정착을 희망하는 경우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과 협력을 통해 난민자격을 부여하여 미국 입국 추진
 - 지속적으로 미국 정착을 희망하는 탈북자들의 입국을 적극적으로 허용할 것임을 밝히고 있으나,

- 제3국의 출국허가 상 협력이 어려운 점을 지적하고 있음.
- 라오스 체류 탈북청소년 3명의 사례에서와 같이, 본인들이 일차적으로 미국 정착을 희망하였으나 라오스가 이들에 대한 신원보증을 요구하자 미국이 수용하지 못함에 따라 한국으로 입국
- 인신매매 및 고문피해자 등에 대해 특별한 관심이 부각되지는 않음.

납북으로 인해 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피해 보상 제도화

- 국회본회의는 전후납북피해자 보상법을 통과시켰고, 진실·화해를 위한 진상조사위원회는 납북자관련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사실과 재판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재심을 권고함.
 - 납북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당한 인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및 피해 보상 제도화

남북당국 간 회담 재개로 이산가족사업 본격화

- 남북장관급회담 재개를 통해 대북 인도적 지원과 연계되어 중단되었던 이산가족 사업이 본격화됨.
 -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 사업재개,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본격화됨.
 - 남북 간 인도주의사안들을 풀기 위해서는 대북 지원이 재개되어야 한다는 사실 재확인
 - 북한의 화상상봉센터 건립 및 물자지원이 이루어짐.
 - 이산가족 상봉 시 납북자 가족들의 상봉이 성사됨.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협상 어려움 지속

-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를 남북 장관급회담 및 적십자회담에서 본격적으로 의제화하려던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측과 협의 상 어려움이 지속됨.
 - 북한은 존재를 부정하는 기존의 태도를 고집하고 있으며,
 - 별도의 특별상봉 제도 마련 등이 이루어지지 못함.

외국인 이산가족 및 외국인 납북자의 사례 부각

- 독일여성의 북한납편 생사확인 및 상봉을 위한 노력이 독일적십자사 등을 통해 부각되었으며, 루마니아 여성의 납북사실이 가족들에 의해 확인됨.
 - 이로 인해 이산가족, 납북자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해결노력 구체화

전시 납북자 및 국군포로들에 대한 공식문서 공개

- 미 국방부의 비밀문건 해제에 따라 한국전쟁기간 동안 납치된 민간인과 국군 포로들이 소련으로 이송되어 강제노역에 동원된 사실이 확인됨.



제2권 1호 2007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NORTH KOREAN HUMAN RIGHTS